

#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금융 발전방안 검토\*

조진희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이사)

- I. 서론
- II. 중국과 CLMV 국가의 개혁개방 시 금융개혁과 발전과정
- III.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금융 발전방안
- IV. 나가며

## 〈요약〉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발달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잘 작동하는 금융시스템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금융 제약을 완화한다. 금융제도가 잘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국가들은 경제개혁과 함께 금융개혁을 통해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했다.

중국과 CLMV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부족 경제,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개혁정책을, 대외적으로

\* 이 글은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발간한 NK Insight 2호 「북한 금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 보고서(202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삼성KPMG는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컨설팅 등 제반 영역에서 산업별 전문화와 서비스별 전문체제를 구축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펄 기업임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중국과 CLMV 국가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해 상업은행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구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해외 원조와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것 중의 하나가 금융개혁이다. 앞선 국가들의 개혁개방 시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한 금융개혁과 금융업 발전 과정을 검토하면 다음의 결론에 다다른다.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과 실질적 운영, 이에 걸맞는 금융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자본조달과 대외협력 및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혁개방 초기단계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매금융 상품을 제공해 국내 저축이 촉진되고 자본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금융서비스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북한 경제발전 및 개발과 연계된 다양한 투융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 서론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발달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잘 작동하는 금융시스템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금융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금융제도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조직하고, 거시경제 안정성과 법적·규제적 장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은 금융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제도가 잘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국가들은 경제개혁과 함께 금융개혁을 통해 자본이 형성될

---

1) Levin(2005).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 과거 동구 및 중국 등의 체제전환국, 동남아 체제전환국들이 그러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사유재산과 잉여가치의 추구를 통한 자본축적을 부정하고,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경제주체의 생산, 분배, 소비가 관리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형태의 금융시장은 형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권 몰락과 경제난 이후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계획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2009년 시행된 화폐개혁의 실패로 중앙은행 중심의 공금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적 금융활동은 생산, 유통, 소비 부문에서 그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공금융 기능 강화하고 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혁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2014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 2015년에는 상업은행법을 개정해 합영은행 영업을 허용하고 다수의 상업은행을 설치했다. 상업은행 활성화를 위해 여수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ATM 등 소매 금융업 서비스도 등장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급해 전자결제를 장려하고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과 영수증법을 채택하며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단행하였다.

2021년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는 ‘금융 흐름 및 활용도 평가를 통해 투자 효과를 높이고, 국내 은행권 대출을 활성화해 인민의 생활 개선과 경제발전이 촉진’될 것을 언급하며 자금의 흐름과 금융의 중요성에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교역이 단절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성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융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금융개혁 사례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II. 중국과 CLMV 국가의 개혁개방 시 금융개혁과 발전과정

### 1. 중국

중국 정부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생산활동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등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장경제 도입과 대외개방을 선언하며,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빠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혁 속도와 지역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정부 주도의 경제개혁을 통해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단계별로 상업은행 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개혁을 진전시켜 나갔다. 먼저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중국 인민은행 중심의 일원적 금융시

시스템에서 벗어나 농촌, 외화, 건설, 도시를 담당하는 농업은행 · 중국은행 · 건설은행 · 공상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을 설립<sup>2)</sup>하고, 1986년 중국 교통은행, 1987년 중국 실업은행 등 신규 상업은행이 출범하면서 은행간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시 과거 국가 예산에서 공급받는 형식에서 은행 대출로 전환되어 대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단기 자금시장, 어음할인시장, 외환시장 등 새로운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예금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화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예금이 증가하여 30%대의 안정적인 저축률을 달성하였다. 개인예금 증가에 따라 은행의 대출 자금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은 국유기업의 부정부패, 비효율, 경쟁력 약화, 금융기관의 과잉투자 및 부실대출 등의 누적된 문제가 표출되었다.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표준의 리스크관리를 도입하게 되는데,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은행 · 증권 · 보험 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

2) 농업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이 담당하던 농촌지역의 여수신 활동과 농촌신용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인수하였다. 중국은행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대출과 외환거래 전문은행으로, 건설은행은 국유기업의 장기설비투자 등 자본투자에 자금지원 전문은행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공상은행은 도시지역 상공업 관련 기업에 대한 여수신을 담당하고, 중국 인민은행의 전국 지점망을 인수하였다.

## 2. CLMV 국가의 경제발전과 금융시장 성장과정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은 시장 개방 후 외국 인직접투자(FDI) 증가와 수출 확대에 따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중국의 임금상승과 생산비용의 급증, 기술과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전략과 맞물려 섬유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CLMV 국가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2021년 기준 CLMV 국가들의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캄보디아 6.1%, 라오스 6.5%, 미얀마 6.8%, 베트남 5.4%로 급속한 경제발전에 맞춰 금융시장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금융업은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CLMV 국가들의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 금융부문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CLMV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베트남을 살펴보자.

### 가. 베트남

베트남은 개혁개방 당시 정치·경제적 고립과 함께 개혁정책의 실패로 산업 및 인프라가 낙후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당시 베트남 경제는 구소련에 의존적이었는데, 소련 경제 침체에 따른 원조 급감으로 베트남 개혁 추진이 어려워지고 베트남 국민의 은행에 대한 신뢰 부족에 따른 낮은 저축률은 경제발전을 위한 내부 자본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개혁개방 (도이모이) 정책을 천명하게 된다.

1986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1987년에는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시스템에서 상업은행 기능이 분화된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하며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상은행, 농업은행, 무역은행, 투자개발은행을 분리했다. 또한,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하는 한편,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고 1990년 국가은행법과 금융기관법을 제정해 금리를 개혁하는 등 금융업에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었으며 외환관리 및 보유 완화, 민간기업과 농업에 대한 대출 촉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외국은행 지점 및 합작은행 설립이 허가되면서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이 급속히 증가했다. 도이모이 초기에는 낮은 저축률과 달러 선호 현상에 따라 경제 부흥을 위한 국내 자금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는데,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경제봉쇄가 해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 및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제발전에 탄력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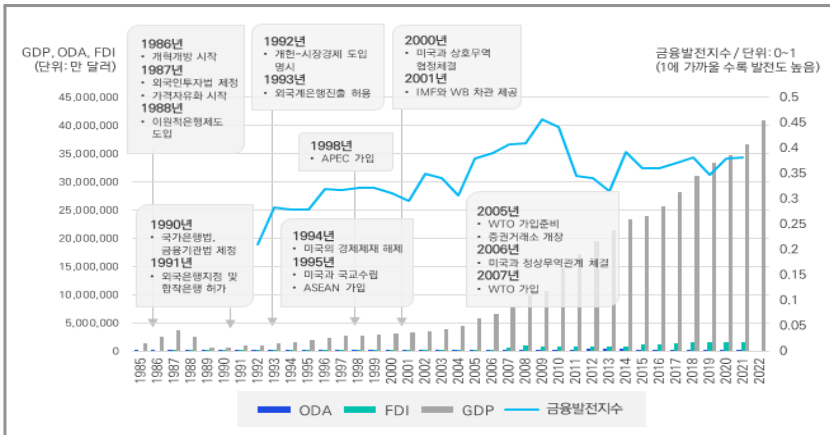
개혁개방 초기 베트남은 국영 상업은행의 부실채권과 비효율적 경영 문제가 발생하며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으며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국은 금융개혁 조치를 마련해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자본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베트남의 은행개혁은 국제기구와 미국 등 양자 간 협정을 통해 진행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은행시스템 구축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1990년대 베트남 은행은 국영 상업은행, 민영상업은행, 정책은행,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고, 2010년대 초까지는 신용 및 재무정보 평가기관이 부재하여 국영·대기업 대상 금융이 주요 업무

였으나, 이후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져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주택구  
매 수요가 발생하면서 개인 대출도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 경  
제·금융제도의 개혁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국제  
금융기구의 가입 및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2006  
년 미국과 정상무역관계(NTR) 체결, 2007년 WTO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금융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금융발전지수는 2009년 0.46  
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0.3에서 0.4 사이에서 등락하며 2021년 기준으  
로 0.38로 세계 평균인 0.33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림 1〉 베트남 시장경제 도입 후 경제·금융 이벤트와 경제지표 추이



자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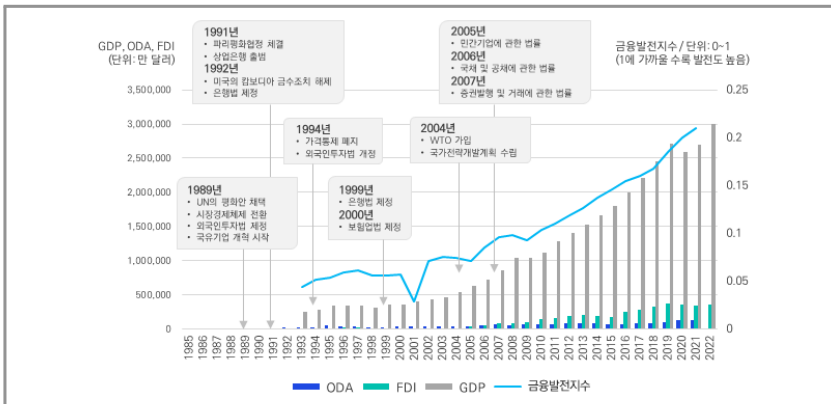
## 나.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1991년 캄보디아 평화 협정  
체결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진입하였다. 1989년 외국인투자



법이 제정되고 1991년 최초로 상업은행이 출범해, 1996년 중앙은행법, 1999년 은행법, 2000년 보험업법, 2007년 증권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시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금융 부문의 개혁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었는데, 국제 금융 표준을 채택하고 금융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캄보디아 금융시장은 2000년 이후 당국의 적극적인 빈곤퇴치 정책의 영향으로 소액금융업(Micro Finance)이 성장해 온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7개였던 소액금융기관은 2020년 수신 취급 소액대출기관 6개, 소액금융대출기관 76개로 증가하였다. 2020년 현재 상업은행은 51개, 특수은행 14개가 운영 중이다. 증권업은 2012년 거래가 시작되어 2020년 현재 상장사가 7개이며, 보험업은 2020년 기준 보험침투율 1.1%, 1인당 수입보험료 17.5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sup>3)</sup>

## 〈그림 2〉 캄보디아 시장경제 도입 후 경제·금융 이벤트와 경제지표 추이



자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분석

3)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19).

캄보디아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1993년을 기점으로 경제지표가 상승하고, 2004년 WTO 가입 이후 FDI가 급격히 증가했다. 1989년 체제전환을 시작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과 상업은행을 출범시키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1990년대 초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금수 조치가 해제되는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가 경제·금융 발전의 출발점으로 보여진다. 금융발전지수는 WTO 가입 후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제도가 마련되면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나, 아직까지는 2021년 기준 0.21로 세계 평균인 0.33보다 낮은 금융시장 초기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유엔자본개발기금(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금융소외계층은 2017년에는 82%에 달했으나 2019년 41%, 2022년 33%로 대폭 개선되며 금융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접근성 개선에 핀테크의 적극적인 도입과 보급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sup>4)</sup> 캄보디아 정부는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 및 ATM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간편결제시스템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금융업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 다. 라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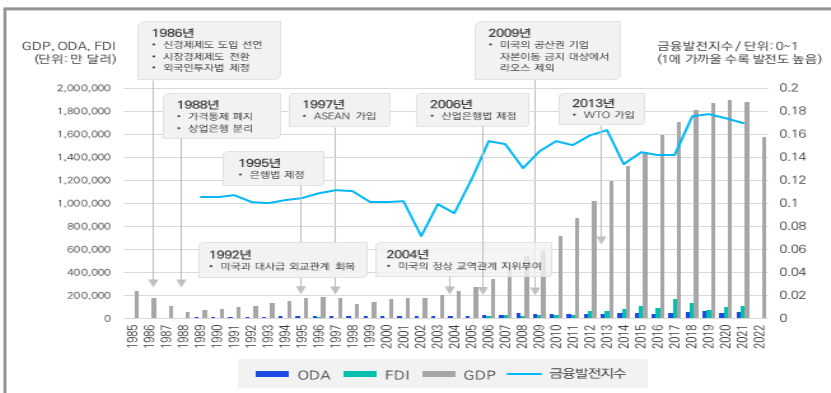
라오스는 1980년대 중반 계획경제체제의 한계와 외부 지원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1986년 신경제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착수하였다. 1986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1988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해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91년 각 지점 단위 중앙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해 상업은행의

---

4) 금융감독원·삼정KPMG(2021).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998년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2007년 상업은행법이 통과되며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은행(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 ANZ Bank)의 진출이 성사되었는데, 이는 라오스 금융산업이 국제표준에 충족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격 통제제도를 폐지해 자유로운 시장 형성 토대를 마련했다.

〈그림 3〉 라오스 시장경제 도입 후 경제·금융 이벤트와 경제지표 추이



자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분석

라오스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GDP, ODA가 증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금융발전지수는 미국과 관계 개선 직후 급격히 개선되어 0.16에 도달한 뒤 0.13에서 0.18 사이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2021년 세계 평균인 0.3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융시장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다.

라오스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중심으로 금융업이 발달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소액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당국의 적극적인 소액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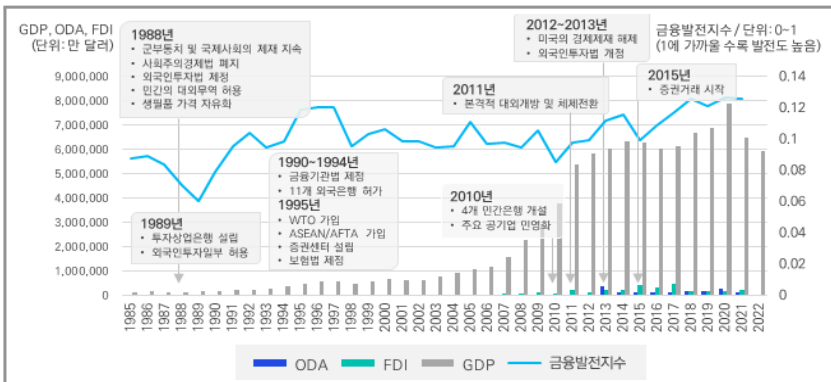
출시장 지원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ODA 기관 및 NGO가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소형 내구재나 자동차 할부리스 시장도 점차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라오스 정부는 UNCDF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와 결제서비스 관련 법률을 도입하며, 핀테크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은 2017년에서 71%에서 2022년에는 42%로 감소하며 금융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 라. 미얀마

미얀마는 1980년대 군부통치시절부터 사회주의경제법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개혁적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국내적으로는 상업은행의 설립, 외국은행의 영업 허가, 증권센터를 설립하고 1995년에는 WTO에 가입하며 글로벌 경제에 발을 들였다.

〈그림 4〉 미얀마 시장경제 도입 후 경제·금융 이벤트와 경제지표 추이



자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분석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1980년대 이후 미얀마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후반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군부정권의 민정 이양과 체제전환,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제재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성장 궤도 올랐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6%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에는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계 은행지점 및 현지법인 영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액금융시장도 활성화 되었다. 금융발전지수는 개혁정책을 추진한 1990년대 중반부터 0.1 수준을 기록한 뒤 0.12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 0.33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CLMV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미얀마는 금융발전지수는 낮으나, 금융소외계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미얀마의 금융소외계층은 2017년 74%에서 2022년 35%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미얀마의 휴대전화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로 금융환경이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미얀마 정부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관련 제도를 발표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및 모바일 채널을 구축하도록 지원해 금융소외계층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3. 시사점

중국과 CLMV 국가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해 상업은행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구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해외 원조와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CLMV 국가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ODA와 FDI가 유입되면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WTO에 가입한 미얀마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개방 시점부터 WTO에 가입하기까지 평균 21년이 걸렸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국영은행, 국영기업의 부실채권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표 1〉 CLMV 국가의 개혁개방 시점과 WTO 가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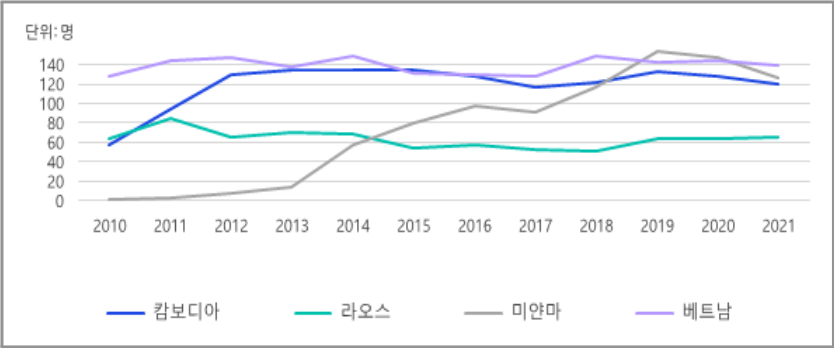
구분	개방 시점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상업은행 출범)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WTO 가입	개방부터 WTO 가입 소요기간
캄보디아	1989년	1991년	1992년	2004년	15년
라오스	1986년	1988년	2004년	2013년	27년
미얀마	2011년	1989년	2012년	1995년	-
베트남	1986년	1988년	1994년	2007년	21년

자료: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CLMV 국가의 금융산업은 저소득층 국민의 빈곤퇴치를 위해 소액금융업을 활성화하면서 확대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전화 이용이 급증하면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시장 서비스가 다양해졌다. CLMV 국가 중 미얀마는 개방 이전인 1990년대에 경제 및 금융개혁이 상당히 진행됐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보다 개혁개방 후발주자인 미얀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시장 발전을 이끌었다. 미얀마 사례는 경제 및 금융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개방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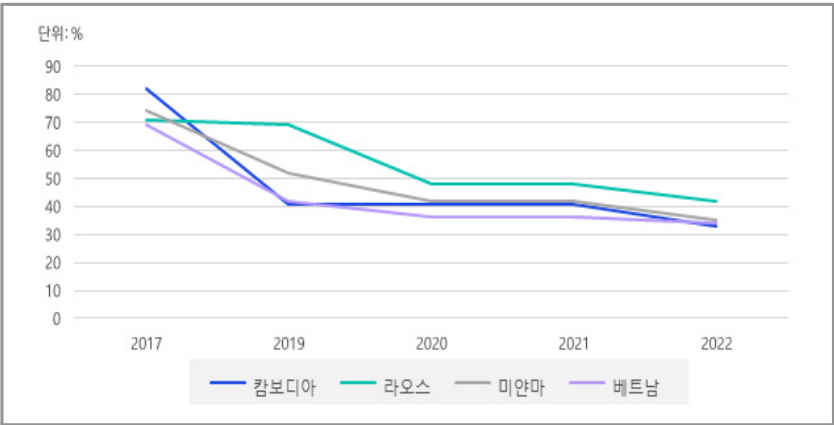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되어야 경제발전의 시너지가 발생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는 금융 접근성의 개선으로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 CLMV 국가의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 보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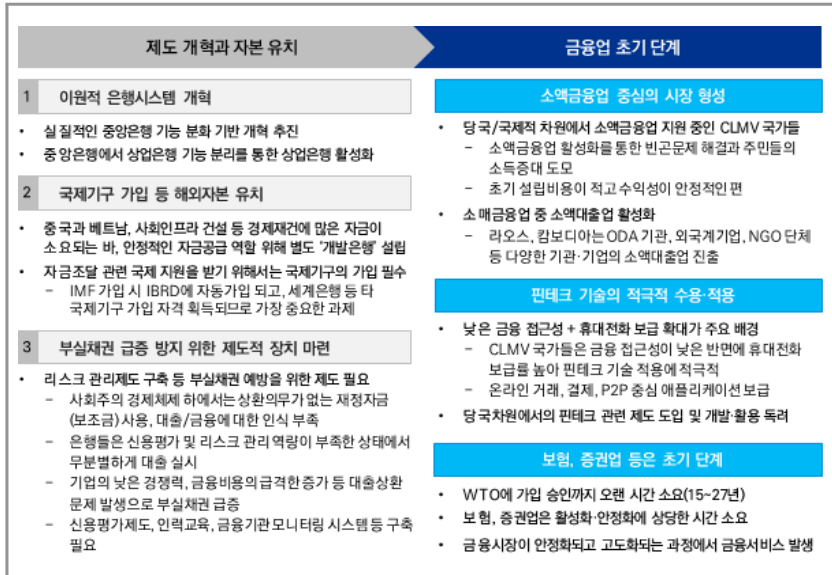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그림 6〉 CLMV 국가의 금융소외계층 비율 추이



자료: 유엔자본개발기금

〈그림 7〉 중국 및 CLMV 국가의 경제개혁 및 금융시장 형성과정



자료: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 Ⅲ.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금융 발전방안

#### 1. 북한 금융의 현실은?

##### 가. 사금융 확산과 공공금융 개혁

북한은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과 거듭된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기관 및 기업소의 생산능력이 현저히 저하됐으며, 주민들은 배급 중단과 화폐개



혁 실패를 겪으면서 당국 및 은행 등 공급유에 대한 불신으로 달러 거래 및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되었다.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 제도를 운용해 온 북한은 공급유 역할이 축소되면서 돈주 중심의 사금융이 확산되었다. 특히 1990년대 국가 계획에 따른 배급이 중단되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장마당)에서 자금 수요, 중국과의 무역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요, 2002년 7.1 조치에 따른 기관 및 기업소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사금융은 1980~1990년대는 자금 대출을 위한 고리대금업과 환전, 2000년대 이후 대부·투자·송금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대되었다. 사금융에서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돈주’는 개인 간 환전과 고리대금업, 예금·송금·결제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역할이 확대되고, 국유기업과의 현물화폐 거래, 부동산 거래, 기업소 및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 등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다양한 금융개혁정책을 추진한다. 2012년 기업 간 현금계좌를 통한 합의가격 거래와 현금 외화계좌를 허용하고 2015년에는 ‘상업은행법’을 개정하면서 합영은행 및 12개 지역상업은행이 등장했다.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과 ‘영수증법’을 채택하고 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북한은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기관 및 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정착시켜 당국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의 활성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심화, 달러라이제이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금융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절대적이고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낮아 금융개혁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심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로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재정법을 개정해 재정계획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돈표 발행, 전화돈 사용 제한, 강제저축 확대 등의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 나. 전자금융 도입과 활용

북한은 2010년대 들어서며 전자금융 및 모바일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조선무역은행은 충전식 전자결제카드인 ‘나래카드’를 발급하고, 조선중앙은행 및 합영은행에서도 전자결제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호텔, 식당, 상점 등에서 전자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류’에서도 전자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북한 원화 충전카드인 전성카드는 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되고 명의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마당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전자결제 및 송금 방식은 휴대전화의 요금체계를 활용한 ‘전화돈’이다. 전화돈은 휴대전화 요금 충전 시 기본 제공되는 통화시간과 문자 이외에 추가로 충전 가능한 금액을 휴대전화 이용자 간 주고받는 일종의 모바일 머니다. 전화돈은 북한 주민 간 소액송금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며, 장마당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사금융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며 북한 당국은 전화돈 사용 제한을 위해 추가적인 충전을 금지하고 1회 충전 금액의 축소, 개인 간 송금 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의 여파로 장마당

활동이 축소되면서 개인 간 결제 및 송금 수요가 급감하며 전화돈 활용도 점차 줄어들었다.

## 2. 북한 금융 발전방안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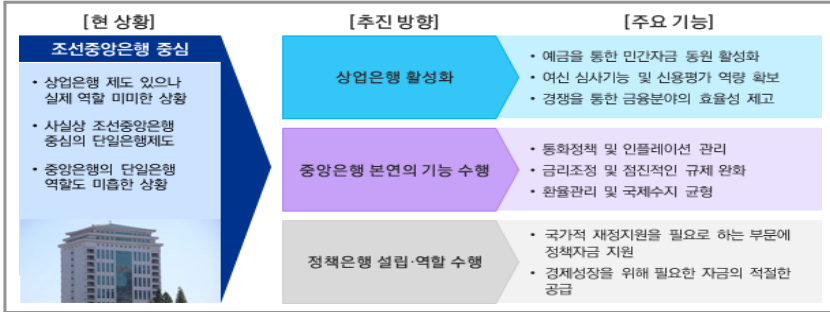
### 가. 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개혁의 첫걸음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과 운영 및 정책금융기관 설립, 예금보호·지급결제·관리감독 등 금융 법·제도 구축, 신용심사 및 리스크 관리·평가 시스템 구축, 부실채권 관련 제도 마련, 기업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금융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를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이원적 은행제도 활성화

북한은 상업은행법을 제정해 표면적으로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은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상업은행이 제 기능을 해야 예금을 통한 민간자금 및 신용평가 역량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요할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별도의 정책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 〈그림 8〉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실질적인 기능 분화 추진



자료: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 (2) 금융 관련 법제도, 시스템 구축

먼저 예금보호제도 및 지급결제 관련 제도 구축, 환제도 개선, 금융시장 관리·감독 관련 법규를 마련해 금융부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제도화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신용정보 심사 및 평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부실채권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들은 금융부문 개혁 과정에서 부실채권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도 개혁 초기단계부터 부실채권 관리 및 심사를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기관과 기업의 경영정보 구축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북한의 기관과 기업들은 인사, 회계, 재무 및 신용평가 등의 경영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관과 기업들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회계 및 재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투융자를

위한 기초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2019년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에 경영전문가(MBA) 과정을 개설해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개혁개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 전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 부문의 신용평가, 위험관리, 대출심사, 담보평가, 자금 및 회수관리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은 북한의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활용

경제개발을 위한 해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원조, 장기저리융자, 장기개발자금, 투자사업융자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활용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 및 일본, EU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ODA 및 FDI 등 공공 및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림 9〉 국제금융기구별 주요 가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시적 가입조건은 없으나, 주요 경제지표 제출 요구(가입 시 쿼터(quota) 산정을 위한 외환보유고, 국민소득, 무역역 등 경제지표, 주요통계의 정확성 등이 전제는 아님)</li> <li>• IMF 상임이사회가 가입 추천 시, 총회는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가입국 참가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 승인 (투표권 1/3 이상 보유국인, 미국, 일본, 서유럽 반대 시 가입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IMF 회원국만 가입자격 부여</li> <li>•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IBRD 회원국 부여</li> <li>• IMF 가입심사 통과 시, IBRD와 IDA가입은 통과되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 또는 유엔 회원국이면서 선진국에 가입자격 부여</li> <li>• ADB는 총 투표권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2/3 이상 가입국 찬성 필요 (미국과 일본의 투표권 비중이 각 12.784%로 가장 높기 때문에 두 국가가 반대하면 가입불가)</li> <li>• AIIB는 ADB 또는 IBRD 회원국이여야 가입 가능, 회원국 총 투표권의 1/2이상 보유하는 1/2 이상 회원국의 찬성 필요</li> </ul>

## 나. 소매금융

개혁개방 당시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의 다수의 빈곤층은 금융소의 계층으로 계, 고리대금 등의 비공식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CLMV 국가들은 지역 마을 단위로 소액금융업을 장려하는 한편, 휴대전화 사용자가 확대되면서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빈곤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 소액금융

소액금융업은 예적금, 소액대출, 할부,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포괄한다. 개혁개방 초기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소액대출사업이다. 북한도 이미 호주 마라나타신탁회사 및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의 소액대출사업을 경험한 바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정부는 주민들의 빈곤퇴치를 위해 소액금융업을 장려하고 다양한 기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동 사업은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지원에 용이하다. 그리고 농기계, 자전거, 오토바이, 가정용 가전제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소비재에 대한 소액대출 및 할부금융을 제공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 단위 소액금융업 접근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 사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돈주와의 마찰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융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즉, 북한 돈주들을 각 지방 내 소액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금융을 공금융으로 흡수하면서 운용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초기에는 지방 특성에 맞는 소액금융 전략을 수립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저축을 통해 자금을 축적하고, 축적된 자금으로 사업자금 대출, 마을 개발과 경제사업에 투자해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 〈그림 10〉 외부 협력을 통한 북한의 소액금융업 사례

코리아 마라나타 신탁회사의 소액대출(2004)	IFAD의 북한 빈곤 극복 사업 재정지원(1996~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마라나타 신탁회사와 북한 재무성의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공장, 소기업, 주민들에게 소액대출 지원 목적</li> </ul> </li> <li>•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2,000 유로 수준의 소규모 대부금 제공</li> <li>- 2005년 기준 대부 이자율은 12%, 대출 회수를 100%</li> <li>- 2005년 기준 총 12만 유로 대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중 약 6,900만 달러의 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업개발(1996~2002), 축산복지지원(1997~2003), 산간지대 식량안보(2001~2008) 사업을 위한 기금</li> </ul> </li> <li>•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중앙은행이 IFAD의 지원금을 받아서 군 단위 지방은행에서 대출하는 온랜당 방식</li> <li>- 대출을 받아 생산활동에 활용한 후 생산물을 협동농장에 되팔아서 상환</li> <li>- 가구당 대출액은 70달러 미만, 이자율 5%</li> </ul> </li> </ul>

자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 (2) 핀테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금융 접근성 및 다양성 제고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CLMV 국가들의 핀테크발전 속도는 우리나라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며 글로벌 서비스에 편입된 경우도 많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의 빅테크 및 투자사들은 동남아 지역의 지급·결제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CLMV 국가들을 비롯한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핀테크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간편결제와 송금, 온라인 은행(Neo Bank)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자금조달과 대출(P2P), 인슈테크, 자산관리도 주목받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는 가장 빈번하고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로, 소비자·기업·판매자 간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서비스 이용 및 전환이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융시장 형성 초기에 소비자와 기업·판매자에

대한 락인(lock-in)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2014년 베트남에서 전자결제서비스 1세대로 시작한 ‘모모(Momo)’는 지급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한 사례다. 베트남 당국의 ‘현금없는 결제’ 정책에 따라 모모는 공공요금 지불, 기부, 보험가입 및 여행,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수년간 베트남 지급결제서비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핀테크 활용이 용이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임베디드 금융업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택시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비금융업을 모태로, 초기부터 슈퍼앱 전략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그랩(Grab)은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차량호출, 음식배달, 택배서비스 등 주민 편의업종에 집중해 수집한 수천만 고객의 비금융데이터를 분석하여 2017년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그랩페이(GrabPay)를 시작으로 소액대출, 소액투자, 신용평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 핀테크 유형별 CLMV 국가의 대표 기업 현황

	간편결제/송금	온라인 은행	자금조달/대출(P2P)	인슈테크	자산관리	핀테크 인에이블러
캄보디아	Clik	ABA Bank	Karprok	BIMA	모산은행	Morakot
라오스	Kinlaya	One				
미얀마	Wing	smart	zigWAY	pulse	scorecard	FINBIT
베트남	mo mo	timo	S	inso	FINHAY	Finngroup

자료: 금융위원회 · 삼성KPMG(2021),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북한 또한 전자카드 및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주민들간 휴대전화 송금이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북한의 전자결제시스템과 전화돈은 핀테크의 초기 수준의 형태로, 이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당국의 지속적인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전 세계적인 핀테크 도입과 상용화 환경으로 인해 북한에서 핀테크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급결제 및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과 비금융업 기반의 임베디드 금융으로 접근하는 방안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경우 금융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방안은 금융업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다. 개발금융 및 기업금융

향후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초기 북한 금융업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개발과 관련한 투융자 부문에서 상당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국제기구, 남한 및 주변국과 북한개발신탁기금 조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 경제개발이 시작되면 경제특구 중심의 개발사업을 비롯해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 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치, 확대해야 한다. 민간투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와 부동산 신탁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이 선호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안정화해 투자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12〉 북한 투융자 방안

구분	방안
국제공조 적극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개발신탁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경제개발에 관심있는 이해당사국들의 ODA 자금 모집</li> <li>주도권 확보를 위해 높은 참여비율 확보</li> </ul> </li> <li>대북투자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정책금융기관과 이해당사국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가 자본 참여</li> <li>북한이 추진한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설립 정책(2011)과 부합</li> </ul> </li> </ul>
민간투자 유치 유인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부동산 신탁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민간자금의 조달 및 대북 투자사업의 위험분산</li> <li>부동산 신탁은 투자수의 확보 및 배분</li> <li>한국의 정책금융기관 또는 한국투자공사의 대북투자사업 신용보강</li> </ul> </li> <li>투자자금 및 투자수의 회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은 재산 소유권 불인정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선호(개성-신의주 고속철도계약서(2014), 원산-금강산관광특구 투자제안서(2016),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2013))</li> </ul> </li> </ul>
단계적 추진 특구, 장려부문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당국의 적극적 관심 유도를 위한 장려부문의 투자 우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부문</li> <li>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부여,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기업소득세율의 하향조정 부과</li> </ul> </li> </ul>
북한의 위험분담 불확실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북 투자 안정성 제고 위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투자보증기구 활용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참가입필요</li> </ul> </li> <li>북한의 위험분담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북투자기금에 북한의 지분 참여</li> <li>북한개발신탁기금이 북한 외채를 시장가격으로 인수, 인수금액에 상응하는 권리를 북한 당국으로 얻어내 대북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분담 유도</li> </ul> </li> </ul>
기술 개발, 보건의료 관련 자원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에 시급한 기술개발과 보건의료사업 관련 ODA 등 국제개발기금 지원</li> </ul>

자료: 금융연구원(2018)을 토대로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재구성

단기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에 북한이 장려하는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고 국제 경쟁력을 위해 외국 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험분담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지분참여 등 단계적인 추진전략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보건의료 관련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술개발 및 보건의료 재건사업은 ODA 등 국제개발기금 및 양자 간 협력사업을 통한 자금지원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이 안정화되고 금융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되면 북한도 WTO 가입과 함께 금융시장 개방, 주식 및 채권시장의 형성, 보험업 활성화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금융업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림 13〉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금융 발전방안



자료: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 IV. 나가며

중국과 CLMV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부족 경제,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개혁정책을,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것 중의 하나가 금융개혁이다. 앞선 국가들의 개혁개방 시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한 금융개혁과 금융업 발전과정을 검토하면 다음의

결론에 다르다.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과 실질적 운영, 이에 걸맞는 금융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자본조달과 대외협력 및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혁개방 초기단계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매금융 상품을 제공해 국내 저축이 축적되고 자본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금융서비스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북한 경제발전 및 개발과 연계된 다양한 투융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sup>18</sup>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융정보 Country Brief, 2022.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라오스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2021.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미얀마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2021.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캄보디아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2019.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베트남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2018.
- 금융위원회·삼정KPMG. 2021 아세안 주요국 핀테크산업 동향 조사, 2021.
- 김민정·문성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제2021-6호, 2021.
- 박은진.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KDB북한 개발』. 통권 17호, 2018.
- 박해식·이윤석.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KIF금융분석 리포트』. 2018권 4호, 2018.
- 양문수·권태진·민병기·이동현.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세종: 산업연구원, 2018.

최이섭 · 이윤석. “주요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사례와 남북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13권 3호, 2020.

코트라. “비상사태 이후 흔들리는 미얀마 금융산업.” 『해외시장뉴스』. 2021.6.

코트라. “전통 금융서비스를 건너편 베트남의 핀테크산업.” 『해외시장뉴스』. 2021.5.

코트라. “베트남 은행업 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 『해외시장뉴스』. 2020.7.

코트라. “거듭 성장하는 캄보디아 은행업.” 『해외시장뉴스』. 2015.6.

코트라. “은둔의 땅 라오스에서 태동하는 금융산업.” 『해외시장뉴스』. 2014.9.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 동북아연구센터 편.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 〈북한 문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021.

#### 〈해외 문헌〉

UNCDF. “2022 ASEAN Monitoring Progress: Financial inclusion in selected ASEAN countries.” 2023.

Levin, Ross.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in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ume 1, Part A, 2005.

## **Reviewing the Financial Development Plan for Normalization of North Korea's Economy**

Jinhee Cho (Director, Samjong KPMG<sup>5)</sup>)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markets is known to contribute positively to promoting economic growth. A well-functioning financial system alleviates the financial constraints faced by various economic players. This is because, if the financial system works well, resources are allocated efficiently and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essential for growth and development is improved. Therefore, countries that want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have improved the environment in which capital can be formed through financial reforms along with economic reforms.

China and CLMV countries pushed for reform policies internally and open policies externally to overcome tribal and economic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nd to develop the economy. China and CLMV countries focused on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foreign aid and investment were possible by introducing a dual banking system so that commercial banks could play a real role while promoting reform and opening up. In particular, financial reform is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has been promoted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by reviewing the financial reforms and financial industry development processes promoted for economic development when the countries reform and open up.

---

5) Samjong KPMG is a multidisciplinary firm that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in the areas of accounting, management, and deal advisory services and has organized its system into specialized industry-specific and service-specific teams to meet the needs of clients.

Above all, financial reform is needed to norm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First, the introduction and practical operation of a dual bank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itable financial system and infrastructure are important, and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s essential for capital raising, external cooperation, and support. In the early stages of reform and opening up, various retail financial products should be provided to residents so that domestic savings can be accumulated and capital can circulate. In addition, while increasing financial access by utilizing fintech,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xpansion of various financial services and seek various investment and loans linked to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development.